

‘역사적인 날’ 남북정상회담... 전북지역은 교류협력에 ‘미소’

도, 남북교류 재개 기대감 상승

농업·축산·자원순환형 복합단지·산림사업 등 추진

남북정상회담이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가운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북도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이 손을 맞잡은 역사적인 만남을 계기로 전북도는 중단됐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도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 동향에 맞춰 도내 각 시·군 및 대북지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기존에 발굴한 농업·축산지원사업, 자원순환형 농축산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을 비롯해 신규사업으로 산림복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축산 지원사업은 축산의약품과 수의·방역기술, 축사관리 기술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자원순환형 농축산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양 동장 신축 및 축산 기술, 사료용역수수 재배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산림복합 사업의 경우 산림토목사업과 연료림·경계림 조성, 산림복원 기술 이전 등이 이뤄진다. 앞서 도는 지난 2016년 대북지원사



남북정상회담 TV 생중계 도내 교실에서도 생생하게 보고 있다.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 전주 온빛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TV 중계를 보고 있다.

업을 두고 사업추진을 검토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통일이 사업승인을 불가해 진행되지 못했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 89억원을 활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또 이르면 7월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과 추진을 위한 기금 운용방안 등의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속하게 재 입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7곳으로 대부분 의무를 생산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이 평화

통일에 기여하겠다”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향후 정부 대응에 맞춰 각급 대북지원사업의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농기계 및 축산 지원 등을 중심으로 북측에 33억2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北, 핵실험장 폐쇄 대외공개

김정은 “무력사용 없을 것”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남북정상회담 추가 합의 발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중으로 핵실험장을 폐쇄하면서 이를 한·미 언론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춘추관에서 지난 27일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추가 합의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김 위원장은 핵 실험장을 5월 중에 폐쇄하고 이를 공개하기 위해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초청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집현회의를 통해 핵 무력 도발 중단을 선언하면서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를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풍계리 핵 실험장은 일부 경도가 붕괴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6차례의 핵 실험을 통해 이미 노후화된 곳여서 북한의 폐쇄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일부에는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시설보다 더 큰 2개의 경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견재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조선전쟁의 아픈 역사는 되풀이 않겠다. 한민족이 한 강토에서 다시는 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결코 무력사용은 없을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체질적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우리와 대화를 해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거짐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발적 군사충돌과 확전 위험이 문제인데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방지하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밝힌 북부 핵실험장 폐쇄 공개 방침에 대해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들의 구체적인 초청 시점은 북측이 준비되는 대로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의 핵실험장 폐쇄 및 대외 공개 천명은 향후 논의될 북한 핵의 검증과정에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진성 기자

트럼프 “향후 3~4주내 북미정상회담 열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밤(현지시간) 미시간주 워싱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앞으로 3~4주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CBS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치열한 유세 연설에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내 생각에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 3~4주 내로 열릴 수 있을

것(it could take place in 3 to 4 weeks)”이라고 말하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진전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명확하지 않지만, 미국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시 남북교류 협력사업 ‘희망의 기운 솟다’

시, 작년 7월 27일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출범 협력기금 존치 기한 신설 등 담은 조례 개정 스포츠·문화·국제 부문으로 나눠 교류 준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가운데 전북 전주시 지역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에도 희망의 기운이 솟고 있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7일 남북교류 협력위원회가 출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총 15명)로 구성된 전주시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는 새 정부 출범 후 남북 민간교류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변화한 남북관계에 맞춰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두달 뒤 진행된 첫 간담회에서는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개정 관련 사항과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초청 강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지난해 11월 진행된 초청 강연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강사로 초청돼 ‘북핵 문제’를 비롯해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현황과 평가,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되기도 했다.

올해 역시 전주시가 추진할 남북교류 협력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난 2월에는 남북관계 전망 및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 방향 제시와 관련한 전문가 포럼도 열렸다.

특히 시는 지난 19일 남북정상회담 확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자체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비하고 나섰다. 개정된 조례에는 남북 협력기금의 존치 기한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할 실무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스포츠와 문화, 국제 부문으로 나눠 북한과 교류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시는 이 밖에도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추경을 통해 자체 협력 기금을 마련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 89억원(전주시 3억5000원 부담)으로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포츠, 문화,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시민·종교단체 응원 종일 이어져

“비핵화·평화 기원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화를 기원하는 시민종교단체들의 응원 물결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시민들은 오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창성동 별관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 1.2km 구간에서 깃발을 만들고 ‘정상회담 비핵화 꼭 성공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태극기를 들었다.

시민 인파 중에는 개성공단대책협의회와 기업인협의회 관계자들도 있었다.

여성단체 평화걷기대회 불교계 ‘금강경’ 독송 시민단체 지지 성명도

사단법인 세계여성평화그룹과 한반도 평화통일여성조직위원회(조직위)는 오전 11시에 경기도 파주 임진각 조국통일선언 비 앞에서 ‘2018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행사를 열고 평화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추경문을 통해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 “한반도 전쟁종식이 실현되고 평화통일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탈북자 임연수(가명)씨는 “한반도 전쟁이 빨리 끝나고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 하루 빨리 고향에 있는 가족과 만나고,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사랑이 비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교계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응원하는 행사를 열었다. 조계종중앙신도회는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2018 행복바라미

문화대추전’ 행사를 개최하고 불교 경전 ‘금강경’을 독송(소리내어 읽기)하며 남북 평화를 기원했다.

금강경은 부처와 수보리(부처의 제자)와의 대화를 담은 불경으로 불자들에게 널리 독송되고 있다.

이날 독송은 조계종 의례위원장인 인복스님의 선창에 따라 행사에 참가자들이 자리에 앉은채 합창하며 진행됐다.

행사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포함해 불교신자와 일반시민 2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시민단체들의 남북정상회담 지지 성명도 이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 지향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라며 “사실상의 국제전이었던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전쟁 종식 선언과 평화 협정 전환에 있어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완전한 비핵화(해폐기)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은 그 지난한 길과 대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남북 정상은 올해 내 종전을 선언하고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2018.5.5(토)~5.7(월)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 2018 6th BUAN OBOK MASIL FESTIVAL

행복의 꿈을 품은 역사도시거로... 옛대 오복받아라... 블랙이글스 에어쇼... 오복당은 달기수확체험... 오복인형극